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실버산업을 육성하자



정대영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실버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회 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며 노인전문 스포츠 레저, 교양강좌, 장례, 가사대행, 노인패션업, 건강식품과 기구등은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꼽힌다.

”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추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이상인구 14%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이상인구 20%이상)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특히 전남은 고령화가 더욱 심해 2030년에 고령인구가 32.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57%로 생산가능인구 2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어 고령화로 인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저하, 기술혁신 둔화, 근로계층감소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소득분배악화로 인한 경제성장둔화와 노인복지비용 증가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 위기가 아닌 기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예상외로 너무 빨리 고령화가 닥쳐와 그동안 이에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것도 사실이다. 고령화사회진입연수(고령인구 7%→14%)를 비교해보면 가장 빠르다는 일본이 24년이고 영국이 47년 미국이 73년 프랑스가 115년 걸린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령화한 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충남과 부산에 정부와

서 대대적인 구조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위기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고 기회의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이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한 대비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노동력 활용방안, 실버산업 (또는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등 많은 분야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버산업은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실버산업이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2차에 걸쳐 14개부문 34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실버제품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이고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2002년 12.8조원에서 2010년에는 43.9조원 2020년에는 148.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실버계층에 대한 인식부족, 관계법령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내수기반과 공급기반이 모두 취약한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충남과 부산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어 고령화가 가장 심해 실버제품 소비계층이 많은 우리지역도 실버산업 지역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 자체적 대비해야

앞으로의 실버세대는 예전과는 달리 지난날 고도경제성장의 주역이었다는 자부심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많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향후 소비주체인 것이다.

또한 실버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회 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며 노인전문 스포츠 레저, 교양강좌, 장례, 가사대행, 노인패션업, 건강식품과 기구등은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꼽힌다.

이제 지자체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급진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형성이 덜 되어 있어 앞으로의 가능성이 큰 블루오션인 실버산업 시장을 파악하여 민간자본과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또다른 차기 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反 FTA 총과업 명백한 불법과업이다

정부가 25일로 예정된 급속노조의 한미 FTA 비준저지 총과업을 불법과업으로 규정해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21일 노동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과업 강행시 노조 집행부는 물론 과업 주도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과업은 목적이, 절차도 옳지 않다며 반발했다. 노조 지도부는 이번 총과업이 반법적으로 이뤄져 온 게 우리의 현실이다. 포퓰리즘, 온정주의에 안주하며 주먹구구 국정 운영 해온 역대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총과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실천해야 한다.

장마 시작했는데 아직 복구공사중이라니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광주·전남지역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해를 입은 하천과 저수지 등 대형 사업장은 장마 전에 복구공사를 끝내야 하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마 시작' 기상예보를 접하는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상승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상승침수지역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일부 지역과 비가 오면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남구 방림동 비탈길 등 재해위험지구는 지금도 공사중이다. 예산 부족과 공사기간이 주요 이유라고 하지만 행정 당국의 소홀한 대처가 안타깝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행정 당국은 수해가 나면 즉속한 복구와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요란을 떨지만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예산 편성이 늦고 설계 등 절차가 복잡해 복구공사가

과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최대 수혜로 예상되는 원성차 부문에서 과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노조원들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지도부의 입장과 세력화를 위한 정치과업일 뿐이다. 오히려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행동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왔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노조의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게 우리의 현실이다. 포퓰리즘, 온정주의에 안주하며 주먹구구 국정 운영 해온 역대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총과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실천해야 한다.

급속노조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이번 과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쟁의 자체를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재난이 재해는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9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여수 연등천 수해복구공사는 아직까지 발주조차 되지 않고 있고 보성 칠동저수지와 여수 쌍봉천, 덕개천 등의 복구공사는 오는 10월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 당국의 능동대처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다시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난이나 재해는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다. 자연현상인 수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법원도 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추세다. 홍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 이상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보고 배상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행정 당국은 지금이라도 수해복구 현장과 재해위험지구 등을 제대로 살펴 응급조치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리산 산행이 즐겁고 정겨운 것은 곳곳에 산장(대피소)이 있기 때문이다. 차일봉~삼도봉~천왕봉~무재처기 폭포까지, 장쾌한 능선엔 노고단·연하천·벽소령·세석·장터목·차밭목 산장이 종종객을 맞이한다. 계곡으로 내려서는 뒀비알엔 피아골·뱀사골·로타리 산장이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엔 맑고 시원 샘물이 솟아난다. 하여 우리 땀바람을 피하

고정희 시인이 글풀산에 씌우려 간 곳도 산장에서 멀지않은 계류였다. 산장에 대풍을 박는다고 자연정화가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심마니 루트며 반야봉 모퉁대 길에서 실종·추락한 사람은 누가 구조하나?

그 옛날 화계재를 넘던 장돌뱅이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샘터에서 배낭을 풀고 목을 축일 것이다. 침낭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던 갈바람, 밤새 두런대던 창문소리. 아, 뱀사골 산장에서의 하룻밤이 그렇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중주꾼이며 피아골·화염사 코스를 타는 사람은 한해 5만여 명을 넘는다.

뱀사골 계곡은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반산까지 12km를 굽이친다. 간장소·단천·벽소령·세석·장터목·차밭목 산장이 종종객을 맞이한다. 계곡으로 내려서는 뒀비알엔 피아골·뱀사골·로타리 산장이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엔 맑고 시원 샘물이 솟아난다. 하여 우리 땀바람을 피하

고정희 시인이 글풀산에 씌우려 간 곳도 산장에서 멀지않은 계류였다. 산장에 대풍을 박는다고 자연정화가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심마니 루트며 반야봉 모퉁대 길에서 실종·추락한 사람은 누가 구조하나?

그 옛날 화계재를 넘던 장돌뱅이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샘터에서 배낭을 풀고 목을 축일 것이다. 침낭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던 갈바람, 밤새 두런대던 창문소리. 아, 뱀사골 산장에서의 하룻밤이 그렇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상규 글루코사민 과다·장기복용 주의를... 뼈와 뼈가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연골은 80%의 수분과 20%의 콜라겐이라는 교원 섬유질과 기질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콜라겐 섬유는 스펀지처럼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그물망에 기질 단백질이 들어 있다. 섬유질과 기질 단백질은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어 있는 기질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글루코사민은 이 두 물질의 일종이다. 이 물질들은 연골세포에서 만들어지지만 연골세포가 손상되면 이런 성분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수분이 그물망 구조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해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연골세포에서 콜라겐 섬유와 기질 단백질을 만들도록 자극하고 활활 세포를 자극해 하이알산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체에서 효과가 있는지 밝

기고 강진원 2010년 F1 대회, 오해와 진실... 때문에이다. 최근 2009년 F1대회 유치를 확정 한 인도는 인도 올림픽위원회(IOA)가 F1프로모터로 나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F1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신규 개최국인 중국, 말레이시아, 바레인 등에서는 F1의 경제적 기여도를 감안,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 민간기업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들도 많지만, F1개최권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당장 자본력이 부족하다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성급한 판단이다. 현재 F1프로모터는 F1개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자들

농산물 부정유통 뿌리 뽑는데 소비자가 나서야... 일부 약덕업자들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어 단속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 판매 할때는 원산지를 말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판매하는 위장판매 행위는 행위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적발하기도 어렵고 단속이 되더라도 범정에서 증거주의 위주의 판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극성을 부리는 실정이다. 지능화된 위장판매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들이 의심될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여 농산물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데 소비자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김경수·무안농산물품질관리원

보육시설에 맡겨야 보육수당 준다나... 유명무실 제도... 갖것, 시댁, 또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60만원정도까지 주며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영아들이 가정에 위탁 보육되고 있는 사회현실에 비춰볼 때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육을 맡길 시설도 없는데, 시설에 맡기지 않는다고 수당을 줄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 보육수당을 못준다니 이런 제도는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김기영·광주시 서구 세하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